

특종과 엠바고

글 | 박성철_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강사 sc0314@freechal.com

‘낙종만 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기자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니 모든 기자들에게 ‘특종’은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도전이자 간절한 바람이다. 물론, 인터넷이 등장하고 매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특종의 가치가 예전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 독자들은 특종인지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종 기사가 보도되기가 무섭게 다른 매체들이 부지런히 뒤따라 보도하는 탓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자 사회의 ‘로망’임에는 틀림없다.

‘모진’ 취재과정 통해 얻는 특종

일말의 단서를 혹은 더 구체적인 정보나 발언을 확보하기 위해 기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궁리하고 실천한다. 비공개회의라고 해서 그대로 물러서는 기사는 없다. 옆방에서 혹은 문틈으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얘기를 듣고 기사를 쓴다. 그들 용어로 일명 ‘벽치기’라고 한다. 실제로 2000년 7월 말, 국회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 회의를 끝까지 남아 ‘벽치기’했던 기자들은 특종을 건질 수 있었다.

현장을 꼼짝하지 않고 지키는 ‘버티기’도 중요한 취재방법 가운데 하나다. 주요 인사의 출두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기자들은 검찰청 현관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예사로 한다. 심지어 식사도 현관 바닥에서 배달시킨 자장면으로 해결한다. 순간을 놓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1994년 1월 한겨레신문의 ‘울시 CIA국장 극비 방한’ 보도도 끈



질긴 추적 끝에 특종을 하게 된 경우다. 당시 기사는 CIA국장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며칠을 잠복한 끝에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는 울시 국장을 카메라에 담는데 성공했다. 황급히 달려온 요원들이 필름을 압수했지만, 이미 필름을 바꿔 끼워 넣은 후였다. 다음 날 신문에는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

한 미국 정보조직 수장의 모습이 공개되고 말았다.

그런데 때로는 기대도 하지 않은 곳에서 특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1988년 5월, 당시 대학신문사의 사진기자였던 한 친구는 명동성당의 집회현장에 있었다. 갑작스런 외마디 구호소리에 그는 본능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서울대 학생인 조성만 씨가 성당 문화관 옥상에서 할복 투신한 것이다. 그는 유일하게 현장을 잡은 사진기자였다. 다음날 신문에는 ‘○○학보사 △△△ 기자 제공’이라는 큼지막한 크레디트와 함께 그가 찍은 사진이 실렸다.

또, 경쟁 언론사가 따라할 수 있는 특종과 그렇지 않은 특종이 있다. 앞의 특종은 언젠가 알려지게 될 사실을 한발 먼저 보도하는 특종이다. 예컨대, 개각 때 후임 장관의 이름을 예측하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기사를 통해 언론사는 자사의 정보력을 자랑하고 신뢰도를 평가받는다. 뒤의 특종은 문힐 뻔한 사실을 발굴해 내는 보도



터 비롯되었다. 논문의 어드밴스 카피를 받아봄으로써 내용을 이해하고 추가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를 미리 공표하는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의학·보건 분야의 연구결과는 동료심사에 의

나 순간의 현장을 잡는 사진기사들이 해당된다.

정치, 사회 뉴스에 비하면 과학 뉴스는 특종이 많지 않은 편이다. 과학 연구성과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 '특종'으로서의 매력도 높지 않다. 그런데 2004년 2월 12일자 '중앙일보'는 1면에 '장기 복제 길 한국인이 열었다'는 드문 과학 특종을 실었다. 황우석 박사 연구팀 논문의 '사이언스'지 게재에 대한 기사다. 이 기사는 곧바로 언론계와 과학계에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연구성과에 대한 감탄이나 특종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엠바고'를 깬다는 점 때문이었다.

과학뉴스 통제 도구로 악용되는 엠바고

엠바고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으로서 보도할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보도될 경우 피의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경우나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계와 언론계 사이에는 관행적으로 지켜져 온 국제적 엠바고가 있다. 세계적 과학저널들은 게재논문들에 대해 자신들의 발간시점까지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주요 저널들은 논문을 제출한 연구자들에게도 엠바고 준수 서약을 받고 이를 어길 경우 논문게재가 취소되거나 향후 논문 제출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는 엠바고 파기의 명분으로 '독자의 알 권리'와 '외신 베끼기 방지'를 들었다. 또, 사이언스지 게재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취재과정을 통해 보도하게 되었으므로 엠바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장 격분한 것은 다른 언론사의 과학담당 기자들이었다. 몇몇 기자의 경우,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회원 자격으로 배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기사를 작성해 놓고 엠바고 해제시각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저널의 엠바고 시스템은 1930~40년대 기자들이 학술대회나 학술지의 논문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구한 데서부

한 면밀한 검증과정 없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들어 '피지컬 리뷰 레터스'의 편집장 새뮤얼 거드스미트는 대중매체에 이미 실린 논문은 절대 게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69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편집장인 프란츠 잉겔핑거는 '다른 곳에 실리지도 투고되지도 않은' 논문만을 게재할 것이라는 편집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고, 점차 과학저널의 엠바고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취재과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등장은 엠바고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와 학술저널, 미디어와 기자가 모두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엄격한 엠바고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문이다. '윌레칼러트'나 '알파갈릴레오' 등 논문소개 사이트의 이용이 확산되는 것도 그렇다.

과학저널의 엠바고는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사작성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자와 과학뉴스를 통제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으며, 새로운 권력과 권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그렇다고 무작정 엠바고를 파기하지는 것은 아니다.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정보제공자와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 엠바고를 전제로 정보를 얻었다면 그 엠바고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전문저널에만 의존하는 취재방식을 바꿔야 한다. 엠바고가 없는 곳에도 많은 연구성과가 있고 훌륭한 과학뉴스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다면 과학저널에 의존하지 않고도 좋은 과학기사가 가능하다.

'한반도에도 티라노사우루스 살았다'는 기사(한겨레 2007년 9월 20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기사는 '고생물학회지'라는 국내 학술지에 실린 중·고교 교사들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명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유명 과학자의 연구성과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과학기사가 될 수 있다. 전문성을 위해 필요했던 전문저널이 과학기자의 전문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㉓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과학문화아카데미 교수부장,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을 지냈다.